




이슈브리프
ISSUE BRIEF



발행일 : 2021년 3월 11일 (목)

CONTENTS

- 5차 재난지원금에 인용되는 통계의 실상
- 서울 특화형 SGBRCB 구축 및 개발·재생 방안
- 기본소득에 대한 동상이몽(同床異夢)과 정책효과

이슈브리프
(IB 2021-04)

CONTENTS

- I. 5차 재난지원금에 인용되는 통계의 실상 / 1
- II. 서울 특화형 SGBRCB 구축 및 개발·재생 방안 / 9
- III. 기본소득에 대한 동상이몽(同床異夢)과 정책효과 / 23
-

발행인: 지상욱

편집인: 김창배

편집위원: 임춘건, 이종인, 이윤식

편집간사: 이시우

발행일: 2021년 3월 11일

발행처: 여의도연구원

인쇄: 디엔시파크

Contents_

이번 호(3월 2째주)는 ▶5차 재난지원금에 인용되는 통계의 실상, ▶서울 특화형 SGBRCB 구축 및 개발·재생 방안, ▶기본소득에 대한 동상이몽(同床異夢)과 정책효과 등 3편의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제1편: 5차 재난지원금에 인용되는 통계의 실상 (김창배 경제정책1실장)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힘을 신기 위한 여권발(發) 억지 통계 해석과 주장이 난무. △코로나 대응 재정지출이 G20중 하위권이니 “나랏 돈을 화끈하게” 풀어라 △선별이 아닌 일괄지급해야 경기진작 효과가 있다 △한국의 재정상황은 양호하다 △국민들이 쓸 돈이 없어 경기회복이 어렵다 등이 대표적. 검증 결과,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만 그것도 ‘선별지급’ 되어야 함. 강도 높은 재정건전성 회복방안의 선(先)제 시도 병행되어야 함

제2편: 서울 특화형 SGBRCB 구축 및 개발·재생 방안 (조세환 한양대학교 명예교수·이종인 수석연구위원)

서울의 경우 녹지의 용도 변경을 통한 택지공급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실정임. 따라서 기 개발 지역의 재개발·재생을 통한 양질의 주택을 다량 공급하는 도시재구조화가 최선의 방안임. 이에 서울 도시·주택정책의 현황을 진단해 본 후 메가시티 서울에 특화된 ‘한강 슈퍼그린복합주거벨트(SGBRCB)’ 구축 방안을 제시함. 동 정책의 추진을 통해 한강 수변공간에 양질의 주택 30만호의 공급과 더불어, 뉴욕 센터럴파크의 3배가 넘는 공원·녹지 공간 확보 등으로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녹색일자리 확보가 가능해질 것임

제3편: 기본소득에 대한 동상이몽(同床異夢)과 정책효과 (장경수 선임연구원)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시민기본권, △4차 산업혁명 일자리 감소 해결책, △기존 복지체계의 개선책 등으로 보는 견해로 구별되며 이에 따라 예상되는 기대 효과는 물론 제도 도입의 당위성도 상당히 상이함. 어느 것이나 문제는 월 30만 원씩 지급 시 소요되는 연 192조 원의 막대한 자원 마련 방법이며 더불어 양극화 해소 및 경기 부양에 대한 실효성도 논란임. 따라서 당장은 사회보험과 사회수당, 사회서비스 등 현재 복지체계의 내실화를 강화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 도입을 지향해야 함을 대안으로 제안함

1. 5차 재난지원금에 인용되는 통계의 실상

작성: 김창배 경제정책1실 실장 (kim.chang.bae@ydi.or.kr)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힘을 실기 위한 여권발(發) 억지 통계 해석과 주장이 난무. △코로나 대응 재정지출이 G20중 하위권이니 “나랏 돈을 화끈하게” 풀어라 △선별이 아닌 일괄지급해야 경기진작 효과가 있다 △한국의 재정상황은 양호하다 △국민들이 쓸 돈이 없어 경기회복이 어렵다 등이 대표적. 검증 결과,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만 그것도 ‘선별지급’ 하는 것이 적절. 강도 높은 재정건전성 회복방안의 선(先) 제시도 병행되어야 함

1. 논의의 배경

- 3월 4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보고서를 내고 전(全) 국민대상 5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주장
 - 작년 2분기만 양극화 지표가 개선된 것은 2분기에 지급된 전 국민 1차 재난지원금이 소득격차 완화에 기여했기 때문이라는 것
- 하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연결 짓기에는 통계 해석이 다소 억지라는 비판이 제기
 - 즉, 동일 금액의 지원금이 지급되면 분모가 적은 저소득층 소득의 증가율이 높아져 소득분배수치가 개선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
 - 또한 이 통계를 역(逆)으로 해석하면 지원금의 효과가 한 분기에 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
- 이처럼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힘을 실기 위한 여권발(發) 억지 통계 해석과 주장이 난무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

2. 지원금의 근거로 인용된 '억지 통계들'에 대한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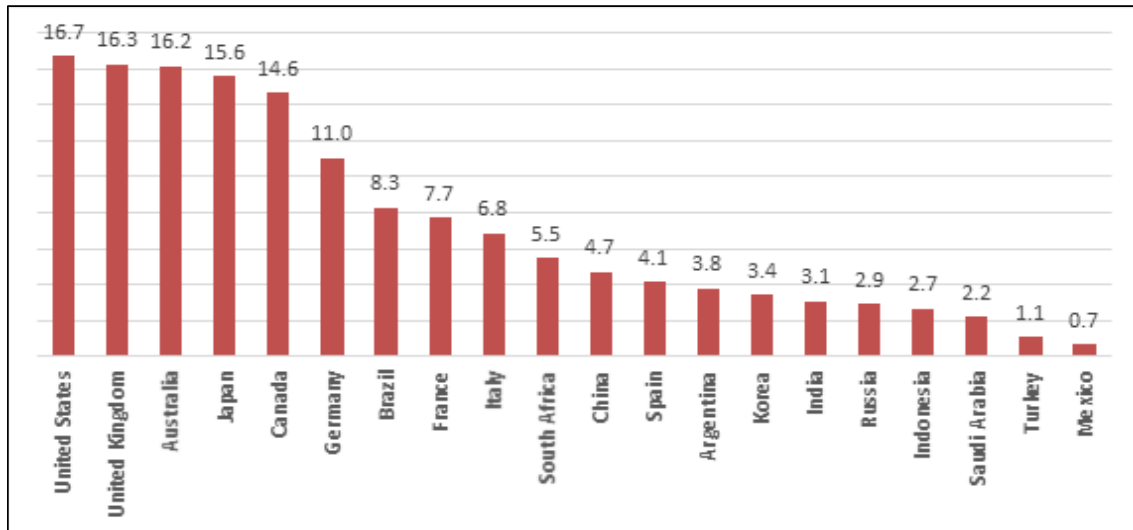
㉠ 한국의 코로나 재정지출, G20중 14위?

○ 여권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국의 재정지출이 G20중 하위권이라며 “나랏 돈을 더 화끈하게 풀어라”라고 주장

-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코로나 대응 추가재정지출은 국내총생산의 3.4%(560억 달러)로 G20 20개국 중 14번째 순위

<그림 1-1> G20 국가들의 코로나19 지원 추가재정지출 및 감세(2020년)

단위: % of GDP



자료: IMF, Fiscal Monitor updates (Jan. 2021)

○ 피해상황, 경기상황 등을 무시한 채 상관성 없는 국제 비교수치만 내세워 ‘적으니 늘려라’라는 아주 단세포적 선동에 불과

- 코로나19 피해상황과 비교하면 우리 재정지출은 오히려 과다하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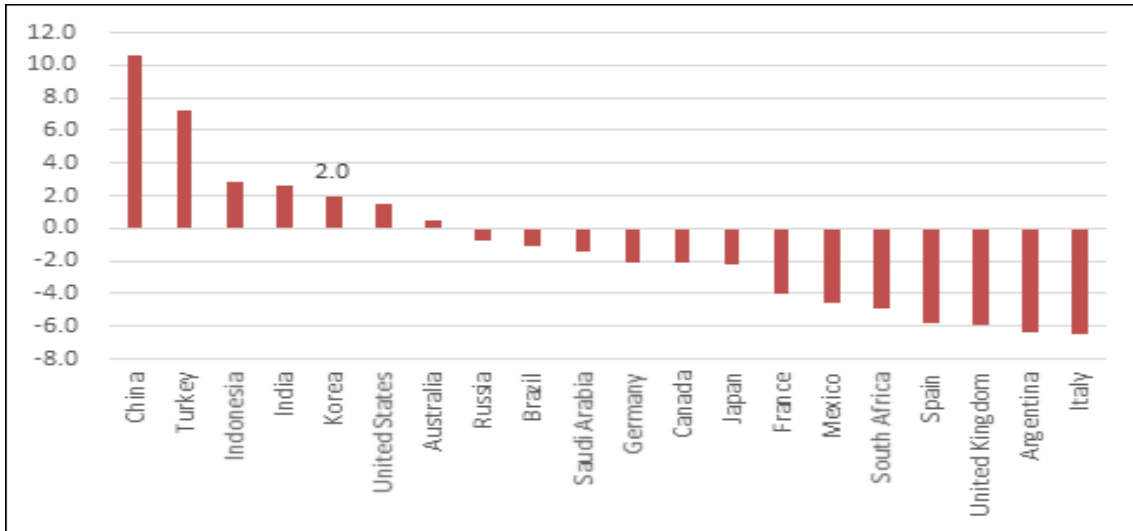
• 인구 코로나 확진자 및 사망자로 볼 때 우리나라 피해 심각성은 20개국 중 18~19위로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재정지출(14위)은 줄여야 할 판

- 경기진작을 위해 재정투입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정부·여당이 자화자찬한 한국의 성장률의 높은 국제 순위와도 모순

- 2020년 성장률은 -1.1%(IMF 전망)로 G20 중 중국 터키에 이어 3위
- 2021년 3.1% 성장하면 2019년 GDP수준을 추월하는 몇 나라에 포함

〈그림 1-2〉 2021년 GDP가 2019년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IMF 전망 기준)

단위: % of 2019 GDP



② 일괄지급해야 경기진작에 효과적?

○ 대다수의 국내외 연구들은 일반적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없었다는 분석을 제시

- 미국의 2020년 경기부양책에 대해 미 의회 예산국은 지출된 1달러당 60센트만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
 - 또한 올 1월 2021년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에서 로머 UC버클리 교수는 “미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양책 규모가 뉴질랜드 다음으로 컸지만 별 효과가 없음이 드러났다”고 지적
 - 로머 교수는 "정책 당국자들은 위기 대응 정책을 펼칠 때 가성비(bang for the buck)를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고 제언
- 우리나라의 경우, KDI는 1차 재난지원금 효과가 없었다고 분석
 - 재난지원금 투입재원 대비 매출증대 효과는 26.2~36.1%에 불과,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을 통한 가구소득 보전만으로는 피해가 큰 사업체의 매출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결론

○ 가계·기업은 미래에 대한 기대(expectation)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일회성 지원금은 소비·투자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함

- 즉, 국가채무가 100조 원 증가한다고 알려지면 경제주체들은 100조 원 이상의 세금 인상을 예상하면서 현재의 소비 및 투자를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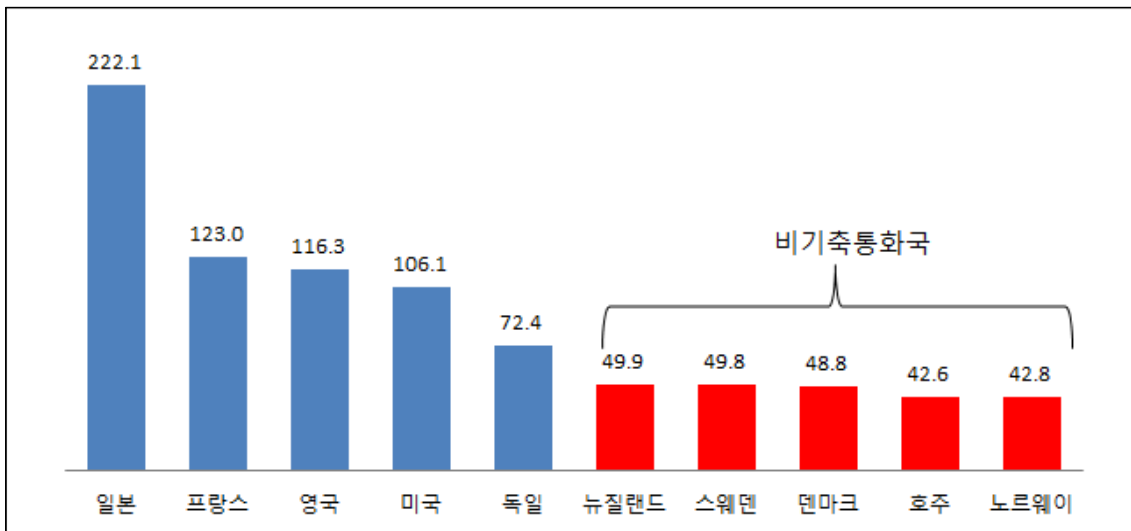
③ 한국의 재정은 양호?

○ 우선, 한국과 기축통화국의 국가채무비율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 기축통화국이 아닌 주요 선진국들은 대체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을 50% 미만으로 낮게 유지

〈그림 1-3〉 OECD 주요국의 국가채무비율(2017년)

단위: GDP 대비 %(일반정부 총부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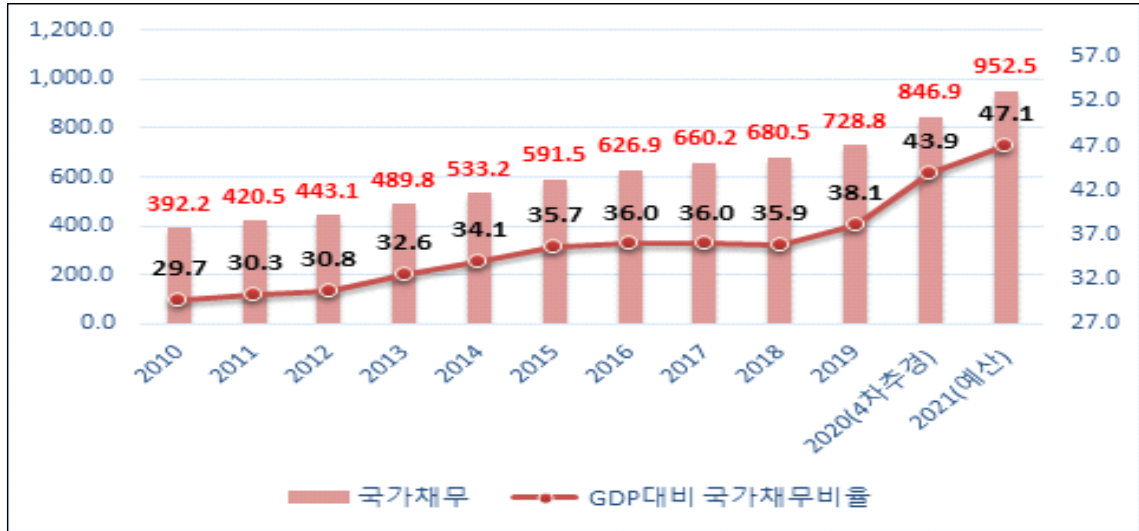
○ 더구나 코로나 장기화로 한국의 재정위기 위험은 더 커지는 모습

- 초슈퍼예산에 4차례 추경 편성이 더해지면서 2020년 국가채무는 846.9조 원을 기록, 2019년(728.8조 원) 대비 무려 118.1조 원 증가

• 국가채무비율은 동기간 38.1%에서 43.9%로 무려 5.8%p나 급등

〈그림 1-4〉 우리나라 국가채무와 국가채무비율

단위: 조원, %



- 문제는 4차 재난지원금에 이은 5차 지원금 그리고 대선용 선심성 공약 등 모두 재정건전성에는 대형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
-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9.9조 원의 국채발행을 포함하면 2021년 국가채무비율은 48.2%로 상승하고 만약 추가적 지원금과 선심성 정책이 가세한다면 이 비율은 쉽게 50%를 넘을 전망

○ 이같은 재정책장이 지속되면 지원금의 경기진작 효과마저도 소멸

- 지금 경기부양에 집중하고 장기적 재정건전성은 나중에 해결하자는 주장은 기축통화국인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나 가능
- 미국은 자체 통화로 차입하고 향후 수십 년 동안 부채를 갚을 수 있고 더구나 미 국채에 대한 높은 수요를 고려할 때 낮은 이자율 유지가 가능함
-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과도한 국채발행이 금리 상승을 초래해 국민이 받은 지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음

4 국민에게 소비할 돈이 부족해 경기회복이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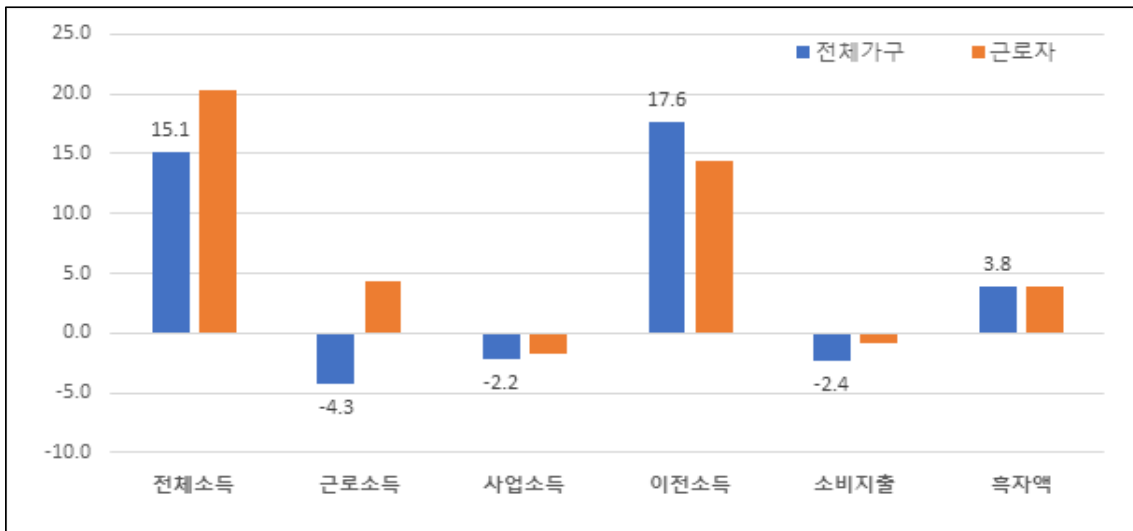
○ 코로나 중에도 상당수의 가계는 흑자 유지함(저축 또는 부채상환)

-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비기회가 감소한 반면 경기부양책, 급여보호 등으로 소득이 보전되었기 때문

- (소득) 2020년 전체 가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전년대비 4.3만 원, 2.2만 원 줄었으나 이전소득이 17.6만원 증가하는 영향으로 전체소득은 오히려 15.1만 원 증가
- (소비) 소비지출은 영업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2.4만 원 감소
- (흑자) 이로 인해 가계의 흑자액(=소득-소비지출)은 3.8만 원 증가

〈그림 1-5〉 2020년 가계 : 근로소득↓, 이전소득↑, 소비지출 ↓ → 흑자액↑

단위: 만원 (전년대비 증감액, 전국 2인이상 비농림가구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이는 경기부진이 소비여력 부족 때문이 아니고 코로나 확산에 대한 두려움과 정부의 일관성 없는 영업제한 때문임을 의미

- 코로나가 진정된다면 소비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

3. 정책적 시사점

□ 전 국민 대상 5차 지원금은 선거용 ‘돈풀기’ 외에는 설명 불가

- 여권의 5차 재난지원금 일정자체가 명백히 선거를 겨냥한 것
 -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은 올 연말 또는 내년 초로 대선 직전임
 - 지금부터 미리 균분을 때면 4·7선거도 ‘돈선거’의 영향권에 포함
- 더구나 코로나가 진정되는 상황에서 왜 지원금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은 선거용 외에 달리 설명하기 어려움
 - 악화된 재정, 양호하다는 국내 경기, 글로벌 부양책 축소 기조, 인플레이션 우려 등 어느 면에서 보나 부적절

□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선별지급’ 지원금 검토

- 어떠한 재정투입이든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의적절(timely), 확실한 대상(targeted), 일시적(temporary)이어야 함
- 특히 영업제한으로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헌법 제23조 3항 손실보상이 규정되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단, 핵심 쟁점은 매월 최대 약 25조 원이 소요되는 재원 마련인 만큼 불요불급 예산 축소, 국채 발행, 재정 긴급명령권 발동, 증세, 기금 활용 등 모든 대안을 열린 자세로 고민할 필요

□ 강도 높은 재정긴전성 회복방안의 선(先)제시도 병행되어야 함

- 책임 있는 정부라면 손실보상으로 인한 재정악화를 향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우선적으로 제시해야함

- 작년 12월, 독일 메르켈 총리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막대한 국가채무가 발생했음을 진솔하게 얘기하면서 “2023년부터는 국가 채무를 갚아나가야 한다”고 호소하는 책임 있는 국가지도자 면모를 보여줌

○ 하지만 현금살포 선심성 입법을 줄줄이 통과시킨데 대한 진솔한 반성없이 그저 돈이 더 필요하니 ‘닥치고 증세’ 또는 ‘부자·대기업 증세’ 등을 추진하려는 여당의 후안무치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가 필요

- 국민의 조세부담, 정책 부작용 등에 대한 고민이 담기지 않는 ‘증세안’은 또다시 사회적 갈등만 부추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임

II. 서울 특화형 SGBRCB 구축 및 개발·재생 방안

작성: 조세환 한양대학교 명예교수¹⁾·이종인 수석연구위원

서울의 경우 녹지의 용도 변경을 통한 택지공급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실정임. 따라서 기 개발 지역의 재개발·재생을 통한 양질의 주택을 다량 공급하는 도시재구조화가 최선의 방안임. 이에 서울 도시·주택정책의 현황을 진단해본 후 메가시티 서울에 특화된 ‘한강 슈퍼그린복합주거벨트(SGBRCB)’ 구축 방안을 제시함. 동 정책의 추진을 통해 한강 수변공간에 양질의 주택 30만호의 공급과 더불어, 뉴욕 센터럴파크의 3배가 넘는 공원·녹지 공간 확보 등으로 서울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녹색일자리 확보가 가능해질 것임

1.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와 도시개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 현 정부는 24차례의 정책실패를 겪고서야 2.4주택공급정책으로 선회했지만, 공공주도 공급이라는 외발정책의 한계에 봉착
 - 지금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주택공급 및 공약이 제시되어 옴
 - ‘호텔을 개조한 주택 공급’, ‘역세권 고밀도화를 이용한 7만8천호 공급’, ‘테릉 골프장의 용도 변경을 통한 주택 공급’, ‘올림픽대로·강변북도의 지하화로 30만 호 주택 공급’, ‘도심 수직정원 공공주택 공급’, ‘경부고속도 및 서초구간 지하화를 통한 지상부 주택 공급’ 등
 - 이러한 정책은 주택문제의 다차원적 도시혁신 관점은 외면한 채 주택물량 확대라는 단일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단세포 정책임
 - 도시의 노쇠화 문제 등을 외면하고 자연(생태)지역의 도시용지로의 용도 변경을 통해 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임

1)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원장·한국조경학회 회장 역임. (현)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명예교수

- 기존의 회색 인프라(도로 등)를 해체한 후 다시 회색 인프라로 재생하겠다는
非진보적 발상
 - 추진 중인 제3기 신도시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정책 역시 서울시의
주택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법으로 보기 어려움
 - 대규모의 자연(생태)자원 파괴 및 도시의 외연 확장 정책으로, 20세기형
신도시개발의 이상(ideal)을 제4차산업사회, 지구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감염병 팬데믹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는 ‘시대 역행’ 정책
- 새로운 도시개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서울의 주택문제 해소가 급선무
- 노후하고 시대에 뒤쳐진 산업화시대의 기성 도시를 ‘도시재구조화재생’
이라는 21세기형 도시개발 패러다임으로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다차원
관점에서 해소해 나가야 함
 - 주택물량의 확대라는 단순·단일 관점에서 탈피, 제4차산업사회로의 진입,
도시 노쇠화,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배출, 감염병 대응 등을 감안한 서울
도시 재구조화·재생 관점에서 혁신적으로 접근할 필요
 - 서울 특화형 ‘슈퍼그린 복합 주거 벨트’(SGBRCB) 구축 및 개발·재생
정책을 제안함
 - 서울시의 시가화 된 구역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하천·공원·녹지 등 오픈
스페이스와 그 주변부를 대상으로 함
 - 도시(Urban) 대 그린(Green)이라는 분리·단절 개념의 전통적 2분법적 도시
개발 관점에서 탈피, 혼성과 융합이라는 새로운 도시개발 관점에서 접근하는
혁신적 주택정책을 제안함

2. 패러다임 전환 및 메가시티 서울의 주택정책 환경

□ 제4차 산업사회로의 도시개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 제4차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은 진화관, 진보관, 자연관 등으로 표현됨

- 지식창조문명이 문명의 극상(climax)에 있으며(진화관), 민주사회와 웰빙 추구(진보관) 및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자연생태의 질서를 회복하고 재생해야 함(자연관)을 의미
- 이러한 3개의 패러다임을 설명하는 핵심 언어는 <그림 II-1>과 같음

<그림 II-1> 제4차산업사회 패러다임의 핵심 언어와 구조



- 패러다임의 전환은 사회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이것은 다시 도시화의 양상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킴
- 서울시의 주택공급 정책 역시 이러한 도시화의 새로운 양상을 반영할 수 있는 도시재구조화·재생의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재생도시 : 산업화시대의 신도시 이상(New Town Ideal)을 넘어설 필요
 - 경험도시 : 도시는 단순히 살아가는 기능의 장소를 넘어 다양한 경험 유발을 통해 경제·사회·문화적 가치를 생산하는 공간으로 인식할 필요
 - 지속가능도시 : 폭염, 게릴라 홍수 등 지구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미세먼지 등에의 대응을 위한 그린 인프라를 구축해야 함

- 혼성-융합도시 : 도시와 자연간, 토지용도간, 지상과 공중과 지하간 낮과 밤 시간 간 융복합 필요
- 플랫폼도시(Platform City), 웰빙과 사회적 형평성의 도시, 그린 스마트 시티 등을 추구할 필요

□ 서울시 도시·주택정책의 현주소

○ 주택 수요에 따른 신규 택지 공급에 한계

- 서울시 행정구역(605.2km²) 내 시가화된 구역 내에서는 공원·녹지 면적을 차지하는 8%를 제외한 92%가 도시적 용도(주거·상업·공업 등) 및 각종 도시적 시설(교통·문화·교육 등)로 점유
- 새로운 택지 확보의 근본적 한계에 봉착

○ 기후변화 대응 등 재난에 무방비로 노출

- 92%가 시가지화 된 상태에서는 폭염·게릴라 홍수, 이산화탄소 흡수 등 기후변화 대응,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감염병 대응, 제4차 산업화에 따른 여가공간 수요 증대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보에 근원적 한계

○ 메가시티 서울 시민의 건강과 웰빙, 사회적 형평성 고취의 한계

- 잘못된 도시구조로 한강과 같은 기존의 공원·녹지 자원에 대한 물리적·시각적 접근성 제한으로 이용권의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
- 공원·녹지의 공공성은 시민들의 사회적 형평성을 고취할 수 있는 수단임

○ 주택 수요와 공급간의 양극화 심화 및 양호한 주택주거환경에 대한 욕구 증대

- 단순한 주택물량 증대보다는 양질의 주택과 숲세권·수세권 등 양호한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대
- 다른 한편으로, 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거지 슬럼화 등으로 인해 빈집·빈땅이

늘어나는 모순

○ 산업사회형 주거지 공급 발상 및 고도제한 중심의 왜곡된 도시개발관

- 한강변 올림픽대로·강변북로,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등 핵심지역의 지하회를 통해 지상부에 다시 회색 인프라 중심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구시대적 발상
- 인구 970만의 메가시티 서울을 고도제한 등의 규제를 통해 시각적 차원의 경관을 관리하겠다는 산업사회적 후진 정책 지속

○ 도시재생에 대한 단편적 접근 및 공원·녹지 등 도시 그린 자원의 도시재생적 활용에 대한 인식 부재 및 비전 부족

- 골목길 환경개선 등 피상적 근린생활환경 개선에 치중하여 주택 자체의 노후·노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
 - 도쿄의 롯본기힐스 같은 도시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경제활성화형 도시재생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한강과 지천, 용산공원, 어린이대공원 등 산재한 수많은 그린 자원은 약 27,8% 비율로 서울의 골격을 이루고 있음
 - 도시 시설로 둘러싸여 섬처럼 폐쇄된 대규모 그린 자원을 주변으로 확산시켜 공원·녹지를 확보하고, 그린 자원과 주거지 등 도시적 용도와의 혼성과 융합을 통해 제4차 산업사회의 도시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재구조화·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차원의 비전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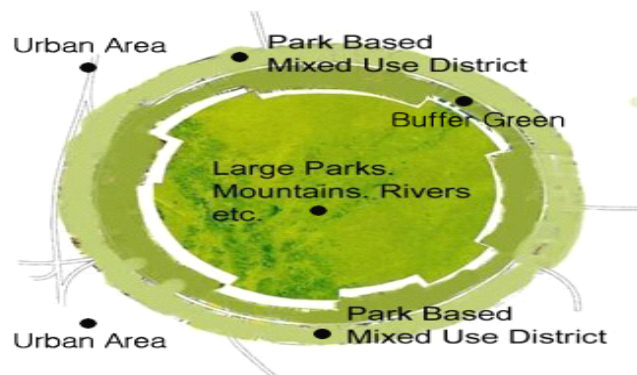
3. 서울 특화형 '슈퍼그린복합주거벨트'(SGBRCB) 구축 방안

□ SGBRCB 모형 및 국내·외 도시지역 적용 사례

○ '슈퍼그린복합주거벨트'(Super Green-Based Residence Complex Belt, 이하 'SGBRCB'로 호칭)는 현재 진행 중인 동시대 제4차 산업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부합한 새로운 용도지구·구역 등으로 정의됨

- 양질의 주택 부족 및 공원·녹지의 절대적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고안
 - 대규모 가용용지²⁾가 희소한 서울시의 여건 및 지나치게 개발된 서울시에 그린과 주거 등 도시적 용도의 융복합지역을 서울 강남북 전 지역에 제공함으로써 서울시를 혁신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일종의 도시재생 목적의 지구·구역 개발의 성격
- 서울시의 기존 블루 자연자원(한강과 지천 등)과 서울시에 파편화되어 산재한 그린 자연자원(대규모 공원·녹지)을 이용
 - 블루·그린 자연자원('핵심 그린': Core Green) 주변부에 완충지대로서의 일정폭의 공원·녹지 벨트를 제1차적으로 두름('완충 그린' : Buffer Green)
 - 제2차적으로 그 외곽에 일정폭으로 높은 녹지율의 그린('전이 그린': Transition Green)과 고밀 주거 또는 주거와 도시적 용도가 융복합되는 공간을 두르는 모형

〈그림 11-2〉 슈퍼 그린 주거복합 벨트(SGBRCB) 모형



2) 용산지역, 롯데칠성부지 일대, 수색역 일대 등

○ SGBRCB 모형의 특징적 장점

- 기 개발된 도시지역을 녹지로 재생시켜 부족한 녹지를 확보할 수 있음
 - 기존의 도시개발은 주로 녹지지역을 용도변경을 통해 주거 등 도시적 용도로 개발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서울의 녹지를 훼손해 왔음
- 저밀·저층으로 개발된 기존의 주거지역을 ‘공원·녹지 확보’와 ‘고밀·고층 재개발’³⁾을 트레이드 오프(Trade-Off) 시켜 양질의 대량 주택공급과 공원·녹지 확보·확산이라는 2가지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달성
 - 건폐율을 제한하는 고층·고밀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로 ‘핵심 그린’ 주변부로 ‘완충 그린’ 및 ‘전이 그린’을 확보함으로써 ‘핵심 그린’을 외연으로 확산·연결시킬 수 있음
 - 이를 통해 개발지 외곽에서 ‘핵심 그린’으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물리적, 시각적 접근을 유도하고 조장할 수 있어 공원·녹지의 이용성을 높일 수 있음
 - 서울시 도시공간에 산재해 있는 하천과 공원·녹지(‘핵심 그린’) 주변부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공간적 균형개발에 기여
 - ‘SGBRCB’에서 개발되는 주거지역은 주거와 그린·상업·연구·상업·문화·업무 등 도시적 용도와 융복합되므로 각 지역의 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음

○ ‘SGBRCB’ 모형을 도시개발·재생에 적용한 실제 사례는 없지만, 모형의 부분 적용 또는 유사 사례는 다수 있음

- 뉴욕의 센트럴파크(Central Park)
 - 도시대형공원 주변부의 개발·재생에 관련된 대표적 사례로서, 약 100만 평 규모로 뉴욕 관광의 랜드마크 중 하나
 - 뉴욕을 찾는 관광객 등 연간 3천7백만 명의 방문객을 맞으며 이로 인해 천문학적인 금액의 관광수입이 발생
 - 센트럴파크로 인해 주변부 지역의 부동산 가치는 매우 높고 그 영향 범위는

3) 일반적으로 하천, 공원·녹지 등 녹지 주변은 조망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저층·저밀로 개발되고 있음. 공원·녹지는 단독주택이든 아파트든 건축물로 둘러 싸여진 ‘도시 섬’(Green Islands)이 됨으로써 물리적, 시각적 접근이 오히려 어렵게 됨.

경계로부터 2.3km에 달하며, 관련 세수는 센트럴파크 수십 개를 건설할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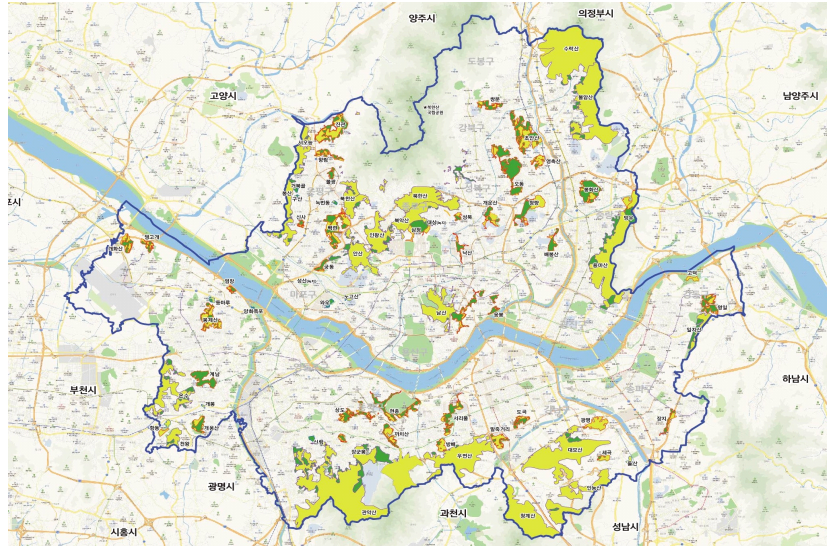
- 마드리드(Madrid)의 리오 만자사레스강(Río Manzanares) 공원
 - 강 양안의 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부를 공원화하여 강과 도시공간을 통합하여 시민들의 만남과 놀이, 관광객 유입 등의 공간으로 조성
 - 스페인 마드리드의 중심 하천인 리오 만자사레스(Río Manzanares)를 대상으로 한 M40 프로젝트도 있음
- 댈러스(Dallas) 중심도로의 지하화 및 지상부 공원화
 - 미국 댈러스의 중심지를 통과하는 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부를 공원화함으로써 도로변 중심지를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에게 휴식과 만남 등의 장소를 제공
- 바르셀로나(Barcelona)의 글로리스 공원 광장
 - 200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 도시 중심지에 세계 최고의 입체형 라운드 어바우트 교통시설을 건설하였으나 2014년도에 그 교통시설을 철거한 후 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지상부에 공원·녹지·광장으로 조성
- 국내의 경우도 경인고속도로, 동부간선도로 등 도로 지하화와 상부 공원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서초구간 지하화 사업도 계획수립 등 진행 중임

□ 메가시티 서울 특화형 SGBRCB 구축 방안

○ SGBRCB 대상 지역의 선정 및 구축 규모

- (선정 기준 및 대상) ‘핵심 블루(하천)자연자원’으로 총 연장 41.5km의 한강 본류와 안양천, 불광천, 탄천, 성내천, 증랑천, 청계천 등 5개 지천의 수변공간을 핵심 대상으로 선정(그림II-3 참조)
- ‘핵심 그린(공원·녹지)자연자원’으로 서울시에 산재하는 공원·녹지 중 비교적 대규모인 3만㎡ 이상의 중대형공원·녹지지역 주변부가 그 대상

〈그림 11-3〉 SGBRCB 벨트 적용 가능지: 블루·
그린(하천·공원·녹지)자원 분포도



- (SGBRCB 구축의 규모) ‘핵심 그린’(Core Green)이 되는 블루(하천) 혹은 그린(공원·녹지) 자연자원의 규모 여부에 따라 최소 250m, 최대 1,000m 범위로 설정 가능⁴⁾
- SGBRCB 구축의 범위 안에 있는 타 공공적 도시시설(교육, 교통, 문화 등)과 상업시설 등 기개발 상태 여부에 따라 그 시설 또는 공간을 제척할 수 있으며, 인접한 다른 핵심 그린에 있을 경우 외연하여 범위를 확장하여 구축할 수 있는 등 융통성 있게 적용

○ ‘한강 SGBRCB’ 구축 및 개발 전략

-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바깥의 한강 양안을 따라 남북으로 0.5~1.0km 폭의 공간을 지정하여 주거와 공원을 기반으로 한 문화연구침단산업·상업·업무 등의 용도 및 융복합 벨트 구축
- 0.5~1.0km 폭의 SGBRCB 벨트 지대 중 상업용도, 교육 등 공공시설, 개별 필지, 교통용지 등 제약이 있는 지역은 제척하는 등 유동적으로 구축

4) 한 번에 쉬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거리가 최대 800m인 점과 슈퍼 블록의 크기가 최소 250m 정도인 점을 고려한 기준임.

- 슈퍼 블록(Super Block)으로 개발하되 무제한의 층고를 허용하여 (초)고층 아파트 또는 (초)고층 복합건축물로 개발
- 건축물의 건폐율은 50% 이하로 규제하되 용적률은 기존의 최대 허용 기준을 적용
 - 다만, 건폐율을 하향 조정하여 용적률을 올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를 도입함으로써 벨트 지대 내 지상부의 공원·녹지 면적을 최대한 확보
- 구축된 '한강 SGBRCB' 벨트 지대에 30만 호의 주택공급 가능
 - 서울시 행정구역 내 총 41km 구간 중 제척지역을 감안하여 50%를 적용할 경우, 벨트의 최하 폭을 0.5km(양안의 경우 1km)로 가정 시 약 20km²의 SGBRCB 벨트 지대 지정이 가능(41km×0.5×1.0km=20km²)
 - 약 600만 평(20km²)의 한강 수변공간이 '슈퍼 그린 복합주거 벨트'로 구축 가능
 - 상기 도시개발 기준을 적용하여 건폐율 50%, 용적률 600%로 산정할 경우 최소 30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이 가능해짐

〈그림 II-4〉 한강 SGBRCB의 평면 구조



〈그림 II-5〉 한강 'SGBRCB'의 적용 대상 및 범위



- 건폐율 50% 적용시 약 300만 평(뉴욕 센트럴파크 3개 크기의 규모)의 자연지반 구축이 가능
 - 구축된 자연지반은 공원·녹지 등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지구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게릴라 홍수, 온실가스과 미세먼지 등 재난 방지는 물론 시민 공동체 형성등사회적 그린 인프라(Socio-Green Infra)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임
- 올림픽대로·강변북로의 지하화 및 지상부의 공원화(이하 ‘한강 리버사이드 파크’로 호칭)를 통해 SGBRCB 벨트와 물리적으로 연결
 - 지금의 한강고수부지공원은 야생의 자연으로 회복시켜 한강의 자연생태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경관생태지역’(이하 한강 와일드라이프 에코 파크로 호칭)으로 지정
 - ‘한강 리버사이드 파크’는 ‘한강 SGBRCB’와 ‘한강 와일드라이프 에코 파크’의 완충지역의 기능을 수행
- ‘한강SGBRCB’의 남북 양안을 하나의 시민 공간으로 통합시키기 위해 통행·만남·전시·비즈니스·상업 등을 위한 복용합 보행교를 건설

○ ‘한강 SCBRCB’ 구축·개발에 따른 기대 효과

- 한강 수변공간에 장단기적으로 양질의 주택 30만호 이상 공급
 - 서울시 주택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현실적 방안의 하나
- 11.5km²의 공원·녹지 공간 확보
 - 한강 SCBRCB 구축에 따른 10km², 올림픽대로·강변북로 지하화에 따른 1.5km²를 합산하면 뉴욕의 센트럴파크 3.5개 크기에 해당
- 40km²의 ‘한강 와일드라이프 에코 파크’ 조성이 가능
 - 인공적으로 조성된 한강둔치를 야생지역으로 회복할 경우를 상정
- 다양한 환경, 웰빙, 일자리, 연구 관련 효과 기대
 -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대응, 이산화탄소 흡수, 생물종다양성 증대, 코로나

팬데믹 등에 대응,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 여가 공간, 자연교육, 녹색 일자리 등

- 전체 서울 시민을 위한 한강으로 변화
 - 강남북 지역 시민들이 어디에서든 쉽고 편리하게 한강으로 물리적, 시각적 접근이 가능함으로써 한강 주변 일부 시민이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의 한강으로 변천
- 도시고속화도로의 지하화 사업과 공원·녹지 등 자연회복과 재생을 통해 4차산업사회의 뉴딜사업 차원에 해당하는 새로운 차원의 녹색건설산업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임

4. '서울 SGBRCB' 정책 추진의 과제

□ 도시개발 관련 제도·규제의 개선

- 슈퍼 블록화를 통해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토록 개별 필지의 통합 개발이 선결되어야 함
 - 재개발,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우선적으로 적용 가능
 -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용도구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조정이 필요
 - 이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자유롭게 하되(Height-Free), 건폐율을 40% 미만으로 하여 지상부에 녹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의 용적률-높이 연계 규제 방식에서 용적율-건폐율 연계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
 - 건폐율을 낮게 잡을수록 용적률을 올려주는 인센티브제 도입
 - 기존의 허용 용적률(준주거지역의 경우 400%)을 최대한 허용
 - 한강 주변부와 같은 특별한 위상을 가지는 경우의 공간에서는 'SCRCB'의 취지에 맞게 초고층 아파트 또는 초고층 복합주거가 가능토록 용적률을 800%까지 허용토록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할 필요

〈그림 11-6〉 초고층 복합주거 및 초고층 아파트 예시



□ 개발 주체 및 자원 조달 문제의 극복

- 해당지역 시민과 민간부분,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의 거버넌스 구축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
- 도로의 지하화 등 공공부분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부분이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소요되는 자원은 사업 추진자가 얻을 수 있는 개발이익을 분담금으로 일부 환수하여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SGBRCB’를 새로운 용도지구로 지정하거나 혹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규정 등 제도적 개정이 필요할 것임

□ 시의적 사업추진 전략

- 한강과 지류 등 ‘핵심 그린’(Core Green)이 선형의 공간 형태를 띠는 경우 ‘SGBRCB’ 사업의 동시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예컨대, 해당 블록의 ‘SGBRCB’ 개발과 전구간의 도로 지하화 시간이 일치하지 않음으로 해서 도로 지하화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음

- 이 경우 서울시는 도로의 지하화에 관한 개발 부담금을 개발 주체로부터 예치 받아 여건 가능 시 추진토록 시간전략 등을 강구할 필요
 - 우선 용산공원, 광진구 어린이 대공원 등 주변부 주거환경정비지구로 지정되었거나 환경이 열악한 지역 또는 잠실 등 재건축이 요구되는 대상지역을 ‘SGBRCB’ 지구로 선정하여 시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SGBRCB 관련 특별법, 국계법 상의 도시계획 관련 법규 개정,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서울의 도시재구조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임

Ⅲ. 기본소득에 대한 동상이몽(同床異夢)과 정책효과

작성: 장경수 선임연구원 (jang.gyeong.su@ydi.or.kr)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시민기본권, △4차 산업혁명 일자리 감소 해결책, △기존 복지체계의 개선책 등으로 보는 견해로 구별되며 이에 따라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물론 제도 도입의 당위성도 상당히 상이함. 어느 것이나 문제는 월 30만 원씩 지급 시 소요되는 연 192조 원의 막대한 자원 마련 방법이며 더불어 양극화 해소 및 경기 부양에 대한 실효성도 논란임. 따라서 당장은 사회보험과 사회수당, 사회서비스 등 현재 복지체계의 내실화를 강화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 도입을 지향해야 함을 대안으로 제안함

1. 기본소득의 논의 배경

- 모든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보수진보진영 모두의 관심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양쪽의 강한 비판도 받는 아젠다임
 -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기본소득 논쟁을 둘러싼 층위(level)가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
- 기본소득 자체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떠한 기능과 효과를 기대하는지에 따라 각기 입장과 견해가 상이함
 -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정책 패키지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문제점이 크다고 보기 때문
- 따라서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분석해봄으로써 도입의 당위성과 효과성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

2. 기본소득을 둘러싼 동상이몽(同床異夢) 견해

① 기본소득을 일종의 시민기본권으로 보는 견해

- 가장 이상적인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접근하는 경우로써 한 사회에서 특정인의 성과로 귀속시킬 수 없는 공유부(共有富)가 존재하며, 이로부터 얻어지는 소득은 공평하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
 - 공유부가 충분히 존재한다면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명분에 반대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실제 공유부라고 할 만한 것들이 과연 얼마나 존재하는가에 의문
- 국가가 대규모 유전을 소유한 중동 국가들이나 노르웨이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득이 창출되는 공유부의 범위에는 제한적임
 - 토지, 천연자원, 지식, 기술, 데이터 등을 모두 공유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 중 데이터 정도를 제외하고 생산성 있는 것들은 대부분 개인 소유권이 확립된 상태
 - 주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가 수익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공유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
- 결국 공유부의 논리는 현재 개인이 소유권을 가진 자산들을 고율의 세금 부과나 국유화를 통하여 사실상 공동소유로 만드는 과정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그렇다면 이것은 더 이상 기본소득의 문제라기보다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인가라는 오래된 논제의 변형이라고 봐야 함

② 기본소득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해결책으로 보는 견해

- 인공지능이 각광을 받으면서 광범위한 직업의 소멸을 경고하고, 대량 실업과 불평등의 확산을 기존의 복지 제도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기본소득의 도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
 - 로봇세 도입을 주장한 빌 게이츠나 미국 대선후보로 나섰던 앤드류 양과 같은 유명인들이 가세하면서 더 주목을 받았음
 - 이 논리는 우리가 처한 사회경제적 환경이 큰 변화를 겪고 있어 그에 상응한 정책기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기본소득이 가장 유효한 대응책이라는 주장
- 그러나 문제는 인공지능으로 인해 일자리가 전면적으로 감소한다는 예측은 아직 실현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
 - 신기술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는 수백년 전부터 있어왔지만 한 번도 현실화된 적은 없음
 - 즉, 기술의 발전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일자리는 줄이지만 항상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왔기 때문
- 더구나 인공지능으로 인해 실업자가 크게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소득이 가장 유효한 대안이라는 증거는 없음
 - 실업자가 광범위하게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장기실업급여제도나 고용보험의 확충이 직접적인 대응책으로서 더 유용할 것

③ 기본소득을 기존 복지체계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론으로 보는 견해

- 현 사회가 처한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복지의 전달체계나 범위에 있어 비효율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본소득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논리
 - 단지 제도적 측면의 효율성만을 비교한다는 점에서 검증과 비교가 가능한 부분임
- 우파적 기본소득이라 불리는 ‘음의 소득세’와의 접점도 여기서 발생하는데, 이는 기존의 복지제도를 저소득층에게는 세금을 걷는 대신에 오히려 돈을 더 보태주는 형태로 대체하자는 것
 - 이 제도는 소득세 징수와 기본소득을 함께 묶은 형태임
 - ※ 예를 들어 모두에게 월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대신에 다른 추가적 소득에 대해서는 10%를 세금으로 걷는다면 추가적 월 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은 결국 40만원을 지급받는 셈이고(음의 소득세), 월 소득 1000만원인 사람은 60만원을 세금으로 내는 셈(양의 소득세)
 - 어차피 기본소득의 재원은 세금이므로 효율적 복지전달체계로서의 기본소득제의 실질적 의미는 음의 소득세와 동일해질 것임
- ☞ 결론적으로 기본소득에 어떠한 기능과 효과를 기대하는지에 따라 입장과 견해가 다르며, 기본소득 도입의 설득력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

3. 기본소득 도입시 현실적 쟁점

□ 쟁점1 : 막대한 재정 소요

-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기대감은 앞서 다양한 견해와 더불어 재정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하면 절망적 한계에 봉착
- 국내 기본소득론자들은 GDP의 10% 정도를 중기 목표로 삼고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자고 주장
 - OECD 평균 조세부담률(24.9%)과 한국 조세부담률(20.0%)의 차이로 인한 우리나라의 재정여력을 GDP의 10%로 간주하고 이를 기본소득에 투입하자는 것
 - 또 OECD 국가의 공공사회지출(GDP 21%)과 한국의 공공사회지출(GDP 12%)의 차이 9%p만큼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 지급하자는 논리임

〈표 III-1〉 기본소득 월 지급액 수준별 재정 소요

	GDP	재정 소요	주민등록인구	월 기본소득
Philippe Van Parijs안 (GDP 25%)	1924조 4529억 원 (2020년)	481조 1132억원	5182만 9023명 (2020년)	773,558원
장기 목표 (GDP 15%)		288조 6679억 원		464,134원
중기 목표 (GDP 10%)		192조 4452억 원		309,423원

자료: 백승호(2020), '기본소득 논쟁 제대로 하기' 발표문, p32.

- GDP의 10% 정도에서 약 30만원 기본소득 지급을 가정했을 때 연 192조 원의 재정이 소요됨

- 이는 GDP의 10%를 차지하는 대규모 사업인데, 이러한 국가사업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없었음
- 국회예산정책처 사회보장정책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유아에서 평생직업교육까지,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과 중앙의 교육비 지출을 모두 합쳐도 93.8조 원, 가장 큰 사회보장 프로그램인 건강보험도 2019년 지출액이 70.8조 원에 불과함
- 과연 30만원 기본소득을 위해 GDP의 10%인 192조 원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을까? 과연 기본소득은 막대한 재정 소요만큼 만족스러운 정책적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에 대한 의문

□ 쟁점2 : 가성비 낮은 정책효과

① 기본소득으로 인한 사각지대 해소는 실효성 없음

- 2019년 9조 3000억 원이 소요된 실업급여제도에서 1인 최저 180만 원, 최대 198만 원을 보장했던 것을 생각하면, 기본소득방식의 가성비는 너무 낮음
- 사각지대 해소는 기본소득이 아닌, 기초연금이나 의료급여처럼 조세 기반 복지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적용하고 수급조건을 완화해 풀어내는 수밖에 없음

② 복지급여에 비해 기본소득에 의한 양극화 해소 효과도 역부족

- 가계금융복지조사(2019년) 자료에 따르면, 소득분위별로 공적이전소득(복지급여)의 절대액에 큰 차이가 없음
- 4분위부터 10분위까지는 공적연금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3분위 이하 저소득층은 조세로 지원되는 재정기반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매우 커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근로장려금(EITC)가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저소득자를 상대로 한 조세 기반 복지급여를 늘리면 양극화 해소 효과가 더 클 것
- 조세 기반 급여라도 동일한 액수의 기본소득을 전체 국민에게 나눠주게 되면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③ 복지급여에 비해 기본소득에 의한 소비 및 경기 부양 효과도 역부족

- 한계소비성향 차이를 무시하고 소득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지급하면 소비증대 효과는 반감될 것
- 복지급여의 대상자인 실직자 등 소득이 격감한 집단이나 저소득 계층은 항상 쓸 돈이 부족해 소득이 생기는 대로 소비하는 반면, 기본소득이 중산층에게도 지급되면 일부 소비가 일어나더라도 상당 부분 저축으로 이전될 것
- 경제침체에 내수진작을 위해서도 기본소득 방식이 아닌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게 적함

4. 시사점

- 기본소득론자들은 우리 사회가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에서 서비스 경제 중심의 탈산업 사회로 전환되면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일자리의 불안정성과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므로 기본소득제가 필요하다고 주장
 - 여기에는 기존의 복지국가 체제로는 탈산업 사회의 일자리와 소득보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음
 - 복지선진국의 주요 정당들은 이런 전제를 거부했으며, 여전히 복지국가 체제를 견지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지금의 시대정신은 기본소득 도입이 아니라 이미 성과가 검증된 현대적 복지국가의 건설임
 - 실질적 보편주의 원칙에 맞게 선진국 수준으로 사회보험과 사회수당을 내실화해야 함
 - 또한 보육, 교육, 의료, 요양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누구나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 다만 기본소득제는 복지전달체계를 효율화하는 전제로서 현실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가치가 있음
 - 당장은 실현되기 어렵기에 청년 등으로 대상을 특정하거나 낮은 금액으로 지급해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타협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한국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제도인지를 정책 실험을 통해 면밀하게 살피고 공론화를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슈브리프 목록 (최근 발간順, 2019~現在)

이슈브리프 2021-03 (발간일: 2020.2.25)

- ▶ 글로벌 탄소중립 추세와 우리의 에너지전환정책 ▶ 한미동맹 현안문제 반성과 '동맹 최적화 전략' 모색
- ▶ 서울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도시생태재생 ▶ 상병수당 도입에 따른 자원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슈브리프 2021-02 (발간일: 2020.2.4)

- ▶ 외교안보라인을 통해 본 미국의 한반도/대북정책 전망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체계의 현황과 개선과제
- ▶ 지난 10년간 서울시 정책 실패 사례 분석

이슈브리프 2021-01 (발간일: 2020.1.14)

- ▶ 북한의 제8차 노동당 대회 개최: 현황, 평가, 전망 ▶ 인구감소시대의 정책 대전환 방향
- ▶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과 향후 과제

이슈브리프 2020-16 (발간일: 2020.12.24)

- ▶ ESG와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 4차 산업혁명시대 통일전문인력 양성방안
- ▶ 코로나19에 따른 영화산업 피해 현황 및 지원방안

이슈브리프 2020-15 (발간일: 2020.12.10)

- ▶ 서울 1인 가구의 다양한 정책 니즈와 시사점 ▶ 주거권보장 중심의 주거정책 추진 필요성과 과제

이슈브리프 2020-14 (발간일: 2020.11.28)

- ▶ 해외 석학들이 본 바이든 新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전망 ▶ 스타트업 해외 성공사례 분석 및 시사점
- ▶ 음식배달 라이더 현황 및 업계 건의 사항

이슈브리프 2020-13 (발간일: 2020.11.12)

- ▶ 2020 美 대선 결과분석: 평가, 전망, 대응 ▶ 공시가 현실화의 문제점과 정책 제언
- ▶ 임대차2법發 전월세대란: 최근 동향과 정책과제

이슈브리프 2020-12 (발간일: 2020.10.29)

- ▶ 노동시장 관련 최근 논점과 개혁방향 ▶ 정당성을 상실한 文정부 탈원전 정책과 시사점
- ▶ 코로나19에 따른 여행관광업계 피해 현황 및 시사점

이슈브리프 2020-11 (발간일: 2020.10.15)

- ▶ 실효성 중심의 재정준칙과 재정감독원 도입 제안 ▶ 북한 암호화폐 절취 실태와 정부 대응의 문제점
- ▶ 부동산 과세 강화의 문제점 진단 및 시사점 ▶ 초고령사회 대비 주택정책 패러다임 대전환 방안

이슈브리프 2020-10 (발간일: 2020.9.28)

- ▶ 전월세전환율 2.5% 강제 인하의 타당성 검토 ▶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의 유통정책 제언
- ▶ 포털 Si알고리즘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이슈브리프 2020-09 (발간일: 2020.9.17)

- ▶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와 정책방향 ▶ 코로나19, 중소기업 생존·도약을 위한 정책제언
- ▶ 코로나19, 국내외 육아보육 정책 검토 및 시사점

이슈브리프 2020-08 (발간일: 2020.8.13)

- ▶ 최저임금 수준, 중위임금 60%로 제도화 ▶ 해외 사례를 통해 본 한국의 '일가정양립정책' 방향
- ▶ 아동학대범죄 현황과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제안

이슈브리프 2020-07 (발간일: 2020.7.23)

- ▶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분석 ▶ 2020 美 대선 판세분석과 향후 대응방안
- ▶ 코로나19에 따른 문화예술인 피해 현황 및 시사점

이슈브리프 2020-06 (발간일: 2020.6.25)

- ▶ 악화로 국가재정, 재정건전성 회복 시급 ▶ 데이터청 설립을 위한 현안과 과제
- ▶ '남북 공동선언' 재점검과 과제: '6·15선언'을 중심으로

이슈브리프 2020-05 (발간일: 2020.5.28)

- ▶ '전국민 고용보험제' 우파적 대안 모색 시급 ▶ '김정은 신변이상설': 대응과 후속조치의 문제점
- ▶ 영국 보수당의 장수 비결과 시사점

이슈브리프 2020-04 (발간일: 2020.4.2)

- ▶ 역대 총선에서의 사전 여론조사의 문제점과 시사점 ▶ 文정권 정책평가와 국정지지도 비교 및 상관관계 분석
- ▶ 'n번방' 사태: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해외사례 검토 ▶ 신종 코로나 충격의 고용감소 추정과 시사점

이슈브리프 2020-03 (발간일: 2020.3.12)

- ▶ 신종코로나의 경제쇼크, 정부대응과 시사점 ▶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속 북한: "바로보기"
- ▶ 포털의 댓글과 실시간검색어 폐지: 의미와 과제

이슈브리프 2020-02 (발간일: 2020.2.13)

- ▶ 문재인 정권의 '국민기만' Top 10 ▶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세대상생형 주거정책 방향
- ▶ 대한민국 2040년: 정치인재 양성과 한국당의 과제

이슈브리프 2020-01 (발간일: 2020.1.16)

- ▶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대한 당의 대응방향 ▶ 최근 美-이란간 충돌 관련: 현황, 파장, 전망
- ▶ 2030 사로잡은 美·日 청년보수정치 사례분석 ▶ 소상공인기본법 통과 의의와 향후 과제

이슈브리프 2019-11 (발간일: 2019.12.19)

- ▶ '초슈퍼' 예산과 '초미니' 재정승수 ▶ 2019 펍수 열풍의 사회적 의미와 교훈
- ▶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의 쟁점과 대응방향

이슈브리프 2019-10 (발간일: 2019.11.21)

- ▶ 탈북자 강제복송: 흔들린 원칙, 상처받은 국격(國格)
- ▶ 공유모빌리티 '타다' 관련 쟁점 및 시사점 검토 ▶ 위험적이며 정치적인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이슈브리프 2019-09 (발간일: 2019.10.31)

- ▶ 공수처, 돌이킬 수 없는 '검찰개악(改惡)' ▶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
- ▶ 점증하는 장기 복합불황 공포

이슈브리프 2019-08 (발간일: 2019.10.10)

- ▶ 文정부 '역대 최고 고용률'의 실상과 대책 ▶ 북한의 SLBM 시험발사: 의도, 평가, 전망
- ▶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위한 제도마련 필요성

이슈브리프 2019-07 (발간일: 2019.9.19)

- ▶ 미국發 '한-일 핵무장론' 대응: 쟁점과 대책 ▶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대비해야
- ▶ 국민연금 재정위험과 개편방안

이슈브리프 2019-06 (발간일: 2019.8.28)

-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배경, 의도, 파장 ▶ '강대강' 대응으로 일본 수출규제 고착화 우려
- ▶ 확대되는 1인 가구와 보수주의 가족가치

이슈브리프 2019-05 (발간일: 2019.3.14)

- ▶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 ▶ 유튜브 '수퍼챗' 논란, 정치자금법의 한계와 시사점

이슈브리프 2019-04 (발간일: 2019.2.28)

- ▶ 궤변으로 덮을 수 없는 최저임금 급등의 부작용 ▶ 사용자 제로, 제로페이
- ▶ 자치경찰제, 성급한 도입으로 인한 실패 우려

이슈브리프 2019-03 (발간일: 2019.2.14)

- ▶ 노인연령 기준 상향 논의의 출발점은 일자리 창출 ▶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해야 할 5가지 이유
- ▶ 드라마 <SKY캐슬>을 통해 본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

이슈브리프 2019-02 (발간일: 2019.1.24)

- ▶ 체육계 성폭력 사건의 민낯과 과제 ▶ 주택공시가격 급속 인상의 문제점
- ▶ 2018 교육여론조사(KEDI POLL) 분석 ▶ 현실과 동떨어진 자동차세와 과세기준 개편 필요

이슈브리프 2019-01 (발간일: 2019.1.10)

- ▶ 저출산 인식에 대한 우리 당의 반성과 인식 전환 ▶ 왜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없애려고 하는가
- ▶ 거짓 통계로 오염된 한국의 소득분배

여의도연구원은 각종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응방안을 담은
〈이슈브리프〉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민의힘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